

# 내년 내국세 수입 3조원 줄어든다

## 정부 '수정 예산안' 재정 적자 심화 우려 환율 상승으로 부가세·관세는 늘어날 듯

경기침체가 심화하면서 내년 내국세 수입이 예초 예상보다 3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에서 내국세 수입이 143조5천534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10월에 내놓은 당초 예산안의 내국세 수입 규모 146조5천334억원보다 2%(2조9천281억원) 가량 감소한 것이다.

경기 부진에 따라 소득세는 당초 예산안에 비해 3.7%(1조5천733억원) 줄어든 41조3천579억원이고 법인세는 3.5%(1조3천729억원) 감소한 37조8천783억원으로 전망됐다. 개별소비세도 내수위축이 심화하면서 예초보다 1.9%(858억원) 줄어든 4조5천353억원이 예상됐고, 상속증여세 역시 상속이나 증여 자산의 일부 가치하락이 예상되면서 0.6%(187억원) 줄어든 3조2천343억원

으로 추산됐다. 이에 비해 부가가치세는 환율 상승의 여파에 따라 0.3%(1천338억원) 늘어난 48조5천890억원으로 전망됐고 내국세 이외의 세목인 관세도 10.1%(9천212억원) 늘어 10조23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수정안을 내면서 내년 원·달러 환율을 예초 전제인 달러당 1천원보다 높은 1천100원으로 보고 세수를 예측했다. 내년부터 카드사에 대해서도 새로 부과되는 교육세의 경우 3.2%(1천379억원) 늘어난 4조3천856억원이 될 것으로 재정부는 전망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당초안과 수정안 제출 시기 간에 별다른 변

화가 없어 1조7천882억원이 그대로일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수정안 제출 이후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장에서 종부세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안으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세수 전망이 달라지게 된다. 내년 내국세와 관세, 교육세, 종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모두 합한 총 국세수입은 당초 예산안의 172조8천352억원에서 1.1%(1조8천690억원) 감소한 170조9천662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세외수입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계획에 따라 국제발행규모가 예초보다 대폭 늘어나 10조938억원에서 20조3천938억원으로 10조3천억원 증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당원들이 검찰의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세번째 영장집행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 檢, 김민석 영장집행 또 실패

서울중앙지검은 20일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측의 저지로 또다시 실패했다. 검찰이 김 위원에 대한 영장집행에 실패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지난 12일 구인영장 집행에 실패했고 16일에는 구속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15분께 수사관 20명을 영등포 민주당사에 보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최고위원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무산되자 이날 오후 철수했다. 검찰은 민주당 측이 이날 오전 1시부터 당원과 지지자 100여명과 승합차를 동원해

방새 당사 현관을 막는 바람에 결국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물리적 마찰을 우려해 일단 경찰력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채 김 최고위원이 자발적으로 집행에 응하도록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치 과정에서 몸싸움이 약간 벌어졌지만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발부된 구속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김 최고위원이 끝내 응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적자예산 편성 불가피" 이한구 예결위원장 밝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은 20일 새해 예산안에 대해 "실물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약속했기 때문에 적자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재정확대를 시키자는 국제 여론에 같이 움직이는 것이어서 제때 못하면 국제적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세출과 관련해 아이벌벌로 철저하게 심사하면 된다"며 "(야당이) 정치구호처럼 뭐 해주면 통과시켜주고 안 해주면 필요한 예산도 안 해준다는 인상을 주면 서로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정부는 원래 돈 쓰는 것을 좋아하고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챙기느라 이에 관승해서 쉽게 예산을 증액하려는 성향이 있다"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치면 다음 세대가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묻지 마 예산' 특수활동비 싸고 격론

### 野 "정권 유지 싹짓돈...대폭 삭감해야" 與 "정치공세...필요성 따져본 뒤 결정"

여야 간 내년 예산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른바 '묻지 마 예산' 특수활동비를 놓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정부의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방침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제대로 된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야당이 무조건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면서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따져본 뒤 삭감 여부를 결정할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업무추진비, 판공비, 특수목적사업비 등 각종 명목으로 책정한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모두 8천624억원으로 작년보다 115억원 증가했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가 10% 예산 절감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고 야당과 반정부 성향 인사 감시, 친정부 성향 고위 등 정권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인기 당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이 명목 정부의 보수정권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문제를 삼을 것"이라며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경상경비 10% 절감을 선언하고도 특수활동비를 확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의 교통부담 외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특수활동비가 정권 유지를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개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증액한 방승통 신위원회에 대해 "인문장악 예산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전액 특수활동비인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회 정보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따지고, 다른 부처에 산재한 4천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도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서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조건 삭감'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는 한편 예결위 차원에서 필요성 문제를 면밀하게 따진 뒤 삭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과거처럼 투쟁적 상황으로 갈 수도"

### 민주 丁 대표 '4월회' 초청 강연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일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야당의 투쟁적이고, 여당의 모든 문제에 대해 강력저항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4월회'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처음에 대표될 때 협력은 협력, 경

쟁은 경쟁, 투쟁은 투쟁으로 나눠 민생문제 등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해왔는데 현 정권의 태도로 보서는 협력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드라이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전반적으로 봐서 공안정국 조성을 비롯한 인권을 경시하는 국정운영, 한마디로 사이버 민주주의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대수생 선명학습원' (Daesu-seung Seonmyeonghakseupwon) featuring a grid of student portraits and text about exam preparation.

Advertisement for '리첸 주방가구 광주직영전시장 OPEN' (Richeon Kitchen Furniture Gwangju Direct Sales Market) showing a kitchen interior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광주정보산업센터' (Gwangju Information Industry Center) detailing membership fees and services.